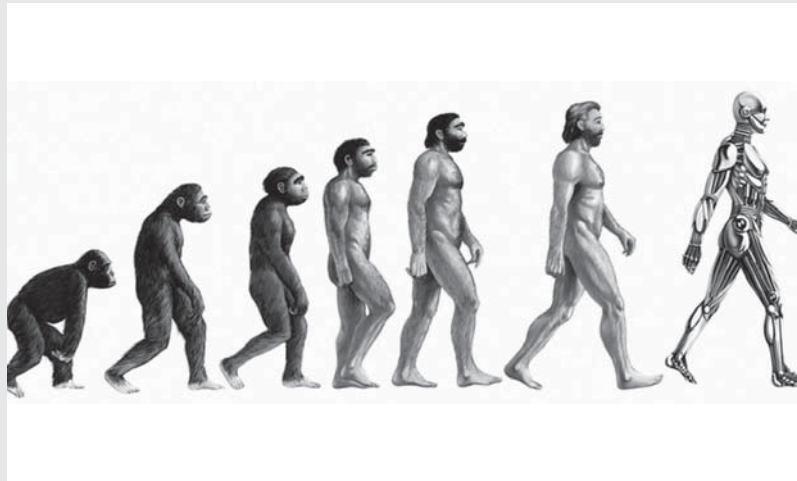


3/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향상의 생명정치학*

신상규



신상규(愼尙揆)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 석사 졸업 후 2003년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의미와 규범성: 목적론적 의미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에 재직하고 있다. 의식과 지향성에 관한 다수의 심리철학 논문을 저술했고, 현재는 확장된 인지와 자아, 인간향상,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푸른 요정을 찾아서』,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내추럴-본 사이보그』,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 SF영화로 보는 철학의 모든 것』, 『키넥트, 너의 지도』, 『새로운 종의 진화: 로보사피엔스』,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의식』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8-362-B00006).

인간향상(human enhancement)이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건강수명 연장이나 노화의 제거를 비롯하여 지적·정서적·신체적·심리적 능력의 개선 혹은 강화를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이러한 인간의 향상을 긍정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이다.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트랜스휴머니즘을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성적·육체적·심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함으로써 인간 조건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의 가능성과 그 바람직함을 긍정하는 지적·문화적 운동”¹이라고 정의한다. 오늘날에도 이미 성형수술, 프로스테시스, 신경약물, 유전자 조작과 같은 다양한 향상기술이 존재한다. 앞으로 등장할 향상기술은 지금의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그에 따른 인간 변형의 정도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일상어 속에서 ‘향상’이란 표현은 어떤 것의 나아짐, 혹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의미하는 긍정적 평가를 내포한다. 그런 점 때문에, 이 표현은 주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사용한다. 그런데 학술적 논의의 맥락 속에서 ‘인간향상’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그 내포한 의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현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향상의 대상은 인간 그 자체이며, 이로부터 마치 인간 존재의 나아짐(betterment of human being)이 귀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인간향상’이 곧 인간의 더 나아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을 통해 향상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갖는 여러 능력이다. 향상은 그러한 능력들의 정도, 강도, 크기가 늘어나거나 개선됨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더 똑똑하고 신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인간향상이 더 나은 인간의 출현 혹은 인간 존재의 더 나아짐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요구되는 것일까?

인간 존재의 나아짐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실천적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윤리 혹은 도덕이란 기본적인

1 Nick Bostrom, “Transhumanist FAQ v2.1,” 2003, <http://www.nickbostrom.com/>

으로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윤리적 관계란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인류 공동체로서의 연대 의식하에 공동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인류가 더 나아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 지향에 맞춘 삶을 살 수 있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향상 논쟁의 지형이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쟁은 주로 인간향상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었다. 나는 그러한 논쟁보다는 자율과 평등의 관계를 두고 벌어지는 좌파와 우파의 대립에서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트랜스휴머니스트로 분류될 수 있는 두 견해, 즉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스트와 기술진보론의 차이를 설명하고, 자율성과 평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진보론의 견해를 옹호할 것이다.

1. 인간향상의 생명정치

IEET(Institute for Ethics and Emerging Technologies)의 디렉터인 제임스 휴즈(James Hughes)는 정치적 견해에 대한 분석은 문화정치학과 정치경제적 차원에 생명정치적 차원을 덧붙인 3차원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생명정치적 차원에서 인간향상과 관련된 논쟁의 전선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상단의 두 칸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인간향상에 대해 우호적인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입장이다. 하단의 두 칸은 인간향상의 시도를 반대하는 생명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향상과 관련하여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진 주 전선은, 상단의 입장과 하단의 입장 사이의 경계를 중심으로 트랜스휴머니스트와 생명보수주의자 사이에 형성되었다. 그 결과 논쟁은 인간향상을 허용할 것인가 혹은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초점은 인간향상에 반대할 어떤 원칙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표 1〉 인간향상의 생명정치적 지형

Techno-progressives (기술진보주의자): IEET, James Hughes	Libertarian Transhumanists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스트): Extropy Institute
Left-wing Bio-conservatives (좌파 생명보수주의자): Sandel, Harbermas, Fukuyama	Right-wing Bio-conservatives (우파 생명보수주의자): Leon Kass

출처: The Institute for Ethics and Emerging Technologies(IEET)의 홈페이지에 분류된 내용을 기초로, 거기에 대응하는 주요 인물이나 그룹을 필자가 분류한 것이다. <https://ieet.org/> 참조.

가의 여부에 맞추어져 있었다.

생명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비판의 논점을 대략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간향상은 예상치 않은 위험이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② 인간향상은 사회적 정의 혹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다.
- ③ 인간향상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오만한 것이다.
- ④ 인간향상은 후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 ⑤ 인간향상은 삶과 관련된 중요한 인간적 가치를 위협하거나 파괴한다.

여기서 우리는 ①, ②의 반론과 ③~⑤의 반론을 다음과 같이 거칠게 구분할 수 있다. ①, ②의 반론은 인간향상이 야기할 것이라 예상되는 나쁜 결과에 입각하여 경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반론이다. 이들을 경험적이라 부르는 이유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예상되는 나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지의 여부는 경험적 사실의 문제이지 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들도 사회적 공정성이나 평등, 안전과 같은 가치 개념에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가치가 침해될지는 여전히 경험적 판단의 대상이다. 이에 비해 ③~⑤의 반론은 인간향상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당 부분 선형적이거나 개념적 논증을 통하여 인간향상의 시도가 내재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가치나 원칙과 충돌함을 보이는 반론

들이다.

지금까지 향상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요 논쟁은 ③~⑤의 논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논쟁이 주로 트랜스휴머니스트와 생명보수주의자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논쟁의 초점은 인간향상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논쟁의 성격이 이렇게 설정되고 나면, 중심이 되는 쟁점이나 고려사항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인간향상에 반대하는 생명보수주의자는 인간향상이 허용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이 입증해야 할 것은 향상이란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을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경험적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인간향상에 대한 반대나 금지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논박을 제시하는 일이 매우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명보수주의자는 원칙의 수준에서 반대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인간향상의 시도 자체에 내재하거나 상당 부분 그로부터 개념적이거나 선택적인 방식으로 추론될 수 있는 규범적 가치의 침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생명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인간 존엄성이나 자율성, 인간의 정복욕과 자만심, 삶의 진정성, '선물로서의 삶'과 같은 개념들로 구성된다. 가령 생명보수주의자인 하버마스(J. Habermas)나 샌델(M. Sandel)은 아이를 유전적으로 디자인하려는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삶에 유일한 저자로서 가져야 할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며, 아이를 출생의 우연성에 의해 태어나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필요나 목적에 의해 제작되는 존재로서 부모의 야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한다.²

이에 대항하여 향상에 찬성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프레임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선택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전략은 자유주의적 자율성이나 관용 그리고 그와 연관된 해악의 원칙 등에 호소하여, 향상의 여부는 본질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판단하

2 위르겐 하버마스, 장은주 옮김,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나남출판, 2003.

거나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임을 주장한다. 이들은 밀(J.S. Mill)의 해악원칙(harm principle)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자율성)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초래하는 한에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만 사회적 혹은 정치적 권력에 의해 제약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나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내리는 선택을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 구도 속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의 주장은 흔히 자유주의 우생학으로 규정된다. 미국의 자유주의 철학의 대변인 격인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이 제안한 “유전자 슈퍼마켓”의 생각이 트랜스휴머니즘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의 핵심을 잘 포착하고 있다. 노직은 유전자 향상 시도의 결과를 판단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 아니며, 자유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과정이 철저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³

닉 보스트롬은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의 향상을 위해 기술의 사용을 원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며, 트랜스휴머니스트는 이러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트랜스휴머니즘은 근대 휴머니즘이나 계몽주의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랜스휴머니스트 또한 인간과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합리적 사고나 자유, 관용, 민주주의 등의 가치에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트랜스휴머니스트는 단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의 잠재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둘 뿐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모습이나 생물학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열망이나 이상, 경험 혹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종류와 같은 것들이다.⁴

3 로버트 노직, 남경희 옮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지성사, 1997.

4 Nick Bostrom, “Transhumanist FAQ v2.1.”

2.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즘과 기술진보주의

그런데 향상의 허용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방식은 향상과 관련된 일부의 쟁점만을 부각하고,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또 다른 쟁점들을 은폐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나는 인간향상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정의나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생명보수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나 밀의 해악원칙과 같은 자유주의적 어휘는 인간향상과 관계된 사회정치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나는 현 단계에서 인간향상의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향상 기술의 발전이나 적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논쟁의 프레임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트랜스휴머니스트와 생명보수주의자 사이의 구도에서는, 논쟁의 초점이 인간향상의 시도와 개념적으로나 선형적 논증으로 연관되어 있는 규범적 가치나 원칙의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항하려면, 트랜스휴머니스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선택 자유라는 자유주의 원칙의 옹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모든 트랜스휴머니스트가 자유 지상주의자라는 잘못된 인상을 갖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논쟁의 방식 때문에 인간향상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규범적 가치나 원칙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가와 같은 개인의 윤리적인 선택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향상기술의 확산은 단순히 개인의 윤리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치적 쟁점이기도 하다. 향상기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특히 그러하다. 물론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의의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 문제가 지금보다 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그 방안 중 하나는 논쟁의 초점을 논쟁의 또 다른 축인 좌와 우의 대립, 특히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스트와 기술진보주의

자 사이의 대립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논쟁의 전선을 이렇게 재설정하고 나면, 사회적 정의나 불평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평등이나 공정성의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향상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 등이 더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모든 트랜스휴머니스트는 원칙적으로 인간향상의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크게 다음의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스트(Libertarian Transhumanist)가 있다. 이들은 생명정치의 차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의 태도를 취한다. 이들은 국가나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며, 향상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불평등은 시장을 통해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말하자면 시장중심적인 자본주의자의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진보주의자(Techno-progressive)가 있다. 이들은 인간 향상 기술의 활용에 찬성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강화된 민주주의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향상기술에 대한 위험 관리나 이로부터 가능해지는 혜택의 사회적 분배를 시장의 기능에 맡겨둘 수는 없으며, 민주적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작동하는 정부나 사회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인간향상 기술의 윤리적 사용 및 이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향상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쟁점에 대한 두 입장의 차이는 <표 2>로 요약된다.

같은 트랜스휴머니스트라 하더라도, 이 두 견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향상기술의 안정성 확보와 향상기술의 혜택의 분배에 있어 이 두 입장은 상당히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향상 논쟁의 전선을 이 둘 사이의 경계로 이동하는 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인간향상은 현실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기보다 다분히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과학기술 발전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은

〈표 2〉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즘과 기술진보주의의 생명정치적 견해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즘	기술진보주의
휴머니즘/종교	인간은 신중한 이성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인간의 열망에는 자연적이거나 신적 섭리에 따른 어떤 명백한 제한도 없다.	
개인의 자유	어떤 의견이나 행동이 야기하는 불편함이나 혐오감(yuck factor)보다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술의 위험	위험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시장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	위험은 민주주의적 감독과 관리의 도움으로 관리 가능하다.
사회적 불평등	법률적인 평등이 보장되고 시장을 통해 향상기술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향상기술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생식권과 출산의 자유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생식질 선택(germinal choice)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막아야 한다. 생식질 선택 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며, 최선의 삶의 기회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도록 장려한다.
생태계 보호	자유시장이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Technogaianism: 신중한 규제와 생태보호적인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생태계 파괴를 개선할 수 있다.
구조적 실업/기초임금보장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노동자는 낮은 임금이긴 하지만 모두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자동화로 가능해진 부와 여가는 기초임금 보장과 짧아진 노동시간을 통해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지구화	지구적 거버넌스, 노동자 보호, 환경 법률 등은 모두 불필요하다.	경제 지구화는 노동자 권리와 보호, 환경 법규, 자본 흐름에 대한 지구적인 수준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동반되는 경우에만 좋은 것이다.

출처: IEET 홈페이지를 참조로 저자가 작성한 것임.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경쟁 메커니즘에서 나오고 있다. 향상기술의 발전은 인간적 삶의 가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작동하는 경쟁 압력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과 효율의 시장적 가치

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과도한 경쟁 지향적인 생활양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향상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한다.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개인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 과학자나 기술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기술이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이 장기적으로 사회의 구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개별 과학자들이 그 전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다.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새로운 발견이나 혁신의 희열을 쫓는 사람들이다.

둘째, 인간향상 기술은 인류의 삶에 다양한 잠재적 혜택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트랜스휴머니스트와 생명보수주의자 사이의 찬반 논쟁의 형식으로 향상기술에 접근할 경우, 향상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혜택에 대한 논의가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생명보수주의자들은 치료와 향상을 구분하고, 과학기술은 오직 치료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치료와 향상의 구분은 그렇게 명료하지 않으며, 향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⁵ 또한 향상기술은 애초에 그 발전이 금지되었다면 전혀 극복 가능하지 않았을 정신적·육체적 질환이나 장애의 치료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공공적 복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존하는 사회적·유전적 불평등의 완화와 같이, 향상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간향상 기술을 금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앞서 언급했듯이, 향상 반대론자들은 대개 규범적인 고려에 입각하여 향상이 인간 존엄성이나 자율성과 같은 가치를 훼손함을 보임으로써, 향상을 금지시킬 원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자

5 치료와 향상의 구분과 관련된 쟁점은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아카넷, 2014, 4장의 논의를 참조하라.

한다. 그러나 인간향상 그 자체에 내재적인 어떤 규범적 잘못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⁶ 만약 향상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고 그 기술의 개발이나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외재적 해악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라고 판단한다.

3. 불평등의 문제

우리는 앞서 인간향상과 ‘인간의 나아짐’ 혹은 ‘더 좋은 인간이 됨’을 구분하고, 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트랜스휴머니스트와 생명보수주의자 사이의 논쟁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들의 논의가 인간적 삶의 가치와 관련된 규범적 지점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종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생명보수주의자들은 인간향상에 반대한다. 이는 사실상 현재의 상태로 인간종을 보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만일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인간성’(humanity)이 왜 중요한가, 혹은 인간의 존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바로 우리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인 한에 있어서, 본능적인 이기적 욕구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도덕적 당위와 이기적 욕구가 충돌할 때, 도덕적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자연적 제약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도덕 행위를 통하여 일종의 초월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기제는 발

6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의 4장과 5장의 논의와 신상규, 「인간향상과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증」, 『과학철학』 18(3), 2015; 「프로메테우스를 옹호함: 인간향상 시대의 인간학과 윤리적 쟁점」, 『과학철학』 18(3), 2015를 참조하라.

생적인 차원에서 진화의 역사로부터 기원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당위와 이기적 요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선택이 갖는 규범성은 결코 그러한 생물학적 기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인간향상에 대한 샌델의 비판이 바로 도덕적 실천 조건의 타락을 염려하고 있다. 샌델은 생명공학을 통한 유전자 변형과 같은 인간향상 논쟁에서, 그 핵심적인 쟁점은 자율성이나 권리의 친숙한 범주들 혹은 비용과 혜택의 계산에 의해서 온전히 포착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우려하는 것은 개별적인 악덕이 아니라 정신의 습관과 존재방식으로서 향상”임을 지목한다.⁷ 그는 인간향상은 완전성과 정복에 대한 충동을 드러내며,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능력이나 성취가 갖는 선물(gift)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면서, 겸손과 책임, 연대라는 도덕적 지평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을 변형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여기서 비판의 핵심은 인간향상의 태도가 내포하고 있는, 혹은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 실천 조건의 악화다.

그런데 향상이 비록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향상기술 그 자체(per se)가 갖는 특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정치 질서에 기반한 우리의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달리 말하자면, 만약 인간향상 기술의 발전이나 적용이 우리의 도덕성이나 그 실천의 조건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샌델이 말하는 향상의 부정적 결과들은 지금 우리가 유지하는 삶의 양식의 결과이지, 향상이 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⁸ 따라서 샌델의 논증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그러한 부정적 결과를 낳지 않도록 향상기술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인간향상의 기술이 인간의 도덕성이나 존엄성의 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7 마이클 샌델, 강명신 옮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동녘, 2010, 143쪽.

8 이 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샌델에 대한 필자의 비판을 참조하라(신상규, 「프로메테우스를 옹호함: 인간향상 시대의 인간학과 윤리적 쟁점」).

우리의 도덕성을 구성하는 가치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맥락은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오늘날의 맥락 속에서 중요하게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들이 무엇인가다. 타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 혹은 타자와의 연대에 입각하여 인류 공동체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인간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당면한 도덕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향상기술 또한 타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류 공동체의 연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사회적 정의나 불평등의 문제가 있으며, 불평등에 대한 염려가 인간향상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향상기술이 제기하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는, 새로운 향상기술의 혜택이 소수의 부자나 권력자에게만 돌아가서 현존하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전 지구적인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활양식 속에서 인간향상 기술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러한 경향에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 수입, 건강, 교육, 의학적 향상 등에 따른 불평등은 더욱 축적될 것이고, 이는 타자에 대한 과도한 지배와 체계적인 착취와 같은 또 다른 심각한 부정의로 귀결될 것이다.

4. 자율성 개념에 대한 재고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랜스휴머니스트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든 기술진보론의 입장이든간에, 모두 향상에 대한 개인의 선택 자유를 종교적 제약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혐오감 요소(yuck factor)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인정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위험 관리나 혜택의 분배와 같은 문제들이 시장의 기능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이거나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개인의 선택 자유나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향상기술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나 통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성의 개념 분석과 함께,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율’의 문자적인 의미는 스스로를 다스리다 혹은 지배한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삶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나 가치, 이상에 맞추어 그것들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자율성의 가치에 충실하다는 것은 결국 삶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지향에 맞추어 삶을 사는 정도를 가능한 높이는 일이다.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스트의 입장에 따르면 향상기술의 사용은 개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두어야 할 문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각 개인이 누리게 되는 자율성의 정도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향상기술의 사용이 개인이 누리야 할 자율성의 정도를 축소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 글은 향상기술이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사용되는 경우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전체적인 자율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첫째, 표면적으로는 향상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억압적이거나 문제적인 사회 규범의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진정한’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우다. 둘째, 향상에 따라 계층 간의 분배적 정의가 악화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자율성이 축소되는 경우다. 이는 비록 향상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율성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율성은 감소되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의 자율성의 증가가 곧 다른 사람의 자율성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자율성이란 개념이 내포하

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자.⁹ 자율성의 첫 번째 의미는 타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로서의 측면을 나타낸다. (이를 자율성¹이라고 부르자.) 이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는 권리로서, 밀의 해악원칙이 서술하듯이 개인의 의지의 자율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국가나 사회의 권력에 의해서 제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권력의 강제는 오직 시민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끼치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만 합법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자율성은 외부의 강제로부터 방어되어야 할 소극적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내세우는 자율성에 대한 옹호는 바로 이러한 의미의 권리로서의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옹호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첫 번째 의미의 자율성과 구분하여, 능력으로서의 자율성을 말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이 타인에 의지하거나 종속됨이 없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스스로의 힘에 따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자율성²라 부르자.) 이러한 자율성은 개인이 얼마만큼 자신의 가치 지향에 맞추어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 측정될 수 있으며, 가능한 그 정도를 진작시켜야 하는 적극적인 가치적 속성의 성격을 갖는다. 자율성²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환경적 조건과 배경, 교육의 정도, 그리고 그 개인이 갖는 기초적인 인지, 물리, 정서적 능력 및 태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존한다.

두 가지 의미의 자율성은 상황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판단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자율성¹은 지켜지지만 자율성²가 저해되거나, 혹은 반대로 자율성¹은 침해되지만 자율성²는 신장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다. 가령 하버마스가 후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생명공학적인 인간향상의 경우가 그렇다. 하버마스는 아이를 선택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유전적 개입은

9 자율성 개념의 두 가지 구분과 함께 그에 입각한 논의의 상당부분은 니클라스 주드(Niklas Juth)의 논의("Enhancement, Autonomy, and Authenticity," in Julian Savulescu, Ruud ter Meulen & Guy Kahane eds., *Enhancing Human Capacities*, Wiley-Blackwell, 2011)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자율성과 평등의 자유주의적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생명공학적인 개입에 의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인간은 스스로를 “자기 삶의 역사의 단독 저자”로 간주할 수 없으며, 또한 아이의 삶을 부모의 일방적인 의지에 종속시킴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사이의 대칭적이어야 할 세대 간의 관계”를 파괴하여 평등의 토대를 침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⁰

하버마스의 논증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의 자율성을 문제 삼고 있다. 아이가 가질 특성을 부모가 선택함으로써, 아이가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율성¹)를 박탈한다는 것이다.¹¹ 그런데 생명공학적인 향상의 경우에, 부모가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식의 특성은 대개 외모나 건강과 같은 신체적 특성이나 지능, 성격과 같은 심리적 능력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특성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특성이나 능력에 해당하며, 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인 수준에서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능력이나 특성의 향상은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¹² 이는 두 번째 의미의 능력으로서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것이다. 따라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생명공학적인 개입은 자율성¹은 침해하지만 자율성²은 신장시킴으로써, 자율성의 두 차원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¹³

10 하버마스의 논증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신상규, 「인간향상과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증」을 참조하라.

11 다른 한편으로, 선택 권리의 측면에서 아이의 자율성과 출산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부모의 선택 권리(자율성¹)가 서로 충돌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아이를 출산하는 데 생명공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심지어 부모의 의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이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아이의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모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줄리안 사블레스쿠는 “부모가 될 사람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아이들 중에서 사용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입각하여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아이를 선택해야 한다”는 출산 선행(procreative beneficence)의 원칙을 주장한다. Julian Savulescu, “In Defence of Procreative Beneficence,” *Journal of Medical Ethics*, 33(5), 2007 참조.

12 레즈비언이자 둘 다 청각장애인이인 샤론 듀세스노(Sharon Duchesneau)와 캔디 매컬로(Candy McCullough) 커플은 유전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의 정자를 이용하여 청각장애아를 출산했다 (Jonathan Glover, *Choosing Children: Genes, Disability, and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이들은 듣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다른 문화일 뿐이며,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훌륭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아이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의 개념에 대한 좀 더 엄밀한 분석과 함께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13 후손에 대한 생명공학적인 개입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쟁점은 물론 이러한 분석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5. 자율성의 진정성

자식의 출생에 대한 개입과 달리, '정상적인' 성인이 자신의 능력 신장을 위해서 인간향상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최소한 표면적으로, 이 경우의 향상기술 적용은 권리나 능력 면에서 정상적인 어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므로, 자신의 향상을 선택한 개인의 자율성¹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능력 면에서도, 경쟁적인 사회구조에서 인지나 신체적 능력의 향상은 좀 더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²를 신장시켜줄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향상을 통한 능력의 증가나 개선은 스스로 원하는 바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심층적인 수준에서 이는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율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가치 지향에 맞추어 그것들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규정한 바 있다. 이때의 자율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에 충실할 때에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을 통한 향상이 언제나 그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가령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오늘날 우리는 유례가 없는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다. 공동체적 유대에 입각한 삶이 가져다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도외시한 채, 자신의 앞가림에 급급한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이 감소되고 일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경쟁

여기서 핵심 쟁점은 결국엔 좀 더 나은 영양이나 교육, 또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의 능력을 신장(향상)하는 전통적인 양육 방식과 생명공학 등의 최신 향상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사이에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함축을 갖는 원리적 구분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적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면, 이는 순식간에 사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향상기술이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향상기술을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강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특정의 방식으로 자신을 향상하려는 선택은 비록 스스로의 자발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며 사회의 타율적인 압박에 따른 것이 되고 만다.

혹자는 ‘진정한’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지적이 자율성에 너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만약 자율성이, 어떠한 사회적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순전히 나로부터 기인하는 독립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율성을 갖지 않는다”는 반박이 그것이다. 우리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특정한 가치나 규범이 통용되는 문화나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이나 교육을 통하여 그러한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모두 비자율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율성의 진정성은 우리가 자라면서 듣고 배우는 다양한 가치나 규범이 우리 인격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는 명백한 사실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비판에 적절히 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율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가치나 규범의 내면화가 일방적이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문화적 교화나 세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의 행위나 판단이 사회적인 환경이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에 맹목적으로 복종한 결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선택을 ‘진정한’ 자율적 선택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율성에는 어떠한 조건이 추가되어야 할까? 나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사실 외에도 자신이 수용하는 가치나 판단의 기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진 최선의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판단 기준과 그것의 구체적 적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선택에 동의한다면, 이는 진정한 자율적 선택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그런데 인간향상에 대한 선택이 사회적 압력에 따른 선택임을 인정하고, 비판적 반성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도 기꺼이 동일한 선택을 한다면,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하는가? 그런 정도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해서 모든 선택이나 판단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압력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이념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판단을 내린다.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서로의 다름에 대한 관용이며,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대한 존중은 결국 그러한 관용의 외적인 표현과 다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억압적인 규범이나 가치의 선택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향상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관행이나 이념의 성격이 무엇인가다. 향상을 추동하는 사회적 압력이 억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규범의 표현이고, 그러한 압력을 수용하는 태도가 문제적 규범의 강화에 기여한다면, 이는 결코 자율적 선택이라는 이름하에서 옹호될 수 없다. 샌델의 문제 제기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샌델은 향상의 추구가 내포하는 정신의 습관과 존재 방식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이로부터 도덕적 실천 조건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향상은 과연 억압적이거나 부도덕한 규범의 확산이나 강화에 기여하는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성적 매력뿐 아니라, 지적이거나 업무적

14 이는 해리 프랑크푸르트(Harry Frankfurt)의 자유 개념을 차용한 설명이다. 프랑크푸르트는 2차적 의욕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명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유를 이해한다. 2차적 의욕이라 함은 특정한 종류의 1차적 욕구를 갖고자 하는 2차적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려는 1차 수준의 욕구를 2차 수준의 욕구에 따라 반성적으로 평가할 때, 그것이 2차 수준의 욕구에 일치한다고 판단해 이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선택했다면, 그러한 선택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인정된다. Harry G. Frankfurt, *The Importance of What We Care About: Philosophical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참조.

능력 혹은 성격마저도 그 외모에 입각하여 단정 짓는 일이 적지 않다. 이는 매우 남성 중심적이며 성차별적인 관행이다. 많은 여성이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가 남성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임으로써, 애정과 관련된 기회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았다면 주어지지 않았을 사회적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은 결과적으로 성차별적인 관행이나 규범을 더욱 강화시킨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적 관행에 부합하여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거나 최소한 도덕적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향상과 억압적 규범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만약 특정한 방식의 향상과 억압적 규범과의 관계가 내재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어서, 그러한 향상의 추구가 언제나 억압적 규범의 강화에 기여한다면, 그러한 향상에 대한 선택은 결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란 이름하에 옹호될 수 없다. 샌델은 생명공학적 향상은 완전성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도덕적 실천의 사회적인 조건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향상과 억압적 규범 사이의 내재적 연관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최소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다.

나는 향상이 필연적으로 도덕의 사회적 실천 조건의 악화로 귀결되지 않으며,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우리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향상기술 자체보다 그러한 기술의 사용을 억압적 규범의 강화로 이끌어가는 삶의 태도나 방식이다. 만일 향상과 그러한 삶의 방식 사이의 관계가 외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라면, 좀 더 합리적인 대응은 향상기술에 모든 책임을 돌리기보다 우리 삶의 방식이나 지향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면서 이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6. 자율성과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에 입각한 향상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에 입각한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향상기술은 그 비용 때문에 주로 부자들만이 접근 가능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제한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의 강화나 확산에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의 확대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혜택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이들을 반영구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함으로써 손쉬운 지배나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어떤 향상기술은 위치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단지 경쟁적인 이점만을 제공할 뿐이며, 인류 사회에 어떠한 적극적 기여도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향상기술을 단순히 개인의 자율적 선택 문제로 간주하고, 정부나 사회의 역할을 안전성에 대한 규제로 국한시킨다면, 새로운 형태의 계급사회가 출현할 가능성은 매우 다분하다.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자율성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앞서 구분한 자율성 개념의 두 가지 의미를 통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스트는 주로 자신들의 입장을 권리로서의 자율성¹, 즉 타인에게서 간섭 받지 않을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옹호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자신의 가치지향에 맞추어서 선택한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으로서의 자율성²는 상대적으로 도외시한다.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도덕 프레임에서는 개인의 자율성¹, 즉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최상의 가치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들은 대개 인간향상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접근한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 권리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언어는 향상과 관련하여 사회적 정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나 도덕적 실천 조건의 악화와 같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밀의 해악원칙을 자율성의 두 번째 의미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자율성²를 침해하는 것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개인의 자율성¹은 사회적·정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삶에서 개인의 성공에는 지능이나 성취욕, 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가령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제임스 왓슨은 지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¹⁵ 만약 과학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게 되고, 혜택을 받지 못한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더욱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후자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다양한 삶의 경로에 대한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오늘날 ‘금수저’나 ‘흙수저’라는 표현들이 상징하고 있는, 집안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개인의 미래가 상당 부분 미리 결정되는 구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경로가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향상은 그러한 상황을 더욱 고착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향상을 선택할 권리(자율성¹)에 대한 (무조건적) 인정이,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타인의 능력(자율성²)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타인의 자율성²의 축소라는 대가를 기반으로 자신의 자율성¹을 보호받는 셈이 된다. 이는 국가와 사회에 의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불평등에는 우리가 감내하고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과 그렇지 않은 불평등이 있을 것이다. 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의 기준은 그 사회의 정치나 경제, 문화적 의식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나는 타고나는 능력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의 배경이 그 사람이 갖는 삶의 기회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더 적을수록 문명화의 정도가 더 높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능력으로서의 자율성²를 분배적 정의의 문제로 접근

15 Mark Henderson, "Let's Cure Stupidity, Says DNA Pioneer," *Times* (London), February 23, 2003, p.13. 왓슨은 이 기사에서 명칭함은 질병이며, 초등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하위 10%는 지능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사는 마이클 샌델,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의 4장에 소개되어 있다.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더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정한 기회를 대개 교육이나 양육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그 한계로 작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개인이 타고나는 지능이나 성품, 적성 등의 능력은 마치 일종의 유전적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 과거에는 이를 어찌할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에 따라 그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나? 인간향상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갖는 자율성²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질 새로운 복지의 가능성 및 기회의 형평성에 대해서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7. 에필로그: 향상기술과 민주적 거버넌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향상기술을 금지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일종의 향상기술 예외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거의 모든 기술은 현존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자 능력이나 문해력은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나 사회적 계층이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를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문자 능력을 갖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향상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향상기술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좋은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향상기술의 발달이나 적용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정치적·사회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서 향상기술은 그 자체로 더 나은 사회나 삶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주지도 않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향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관건은 인간향상이 인간적 삶의 가치와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의 행복이나 복지의 개선, 공동체의 연대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향상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불평등 또한 제도적으로 줄이고 개선할 수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도 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유전적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 능력의 차이를 줄여줌으로써, 모두에게 가능한 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노력 또한 포함될 것이다. 그것이 더 나은 인간이나 사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향상기술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사회단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과정을 통해 감독·통제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며, 인간향상이 어떻게 이에 기여하도록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